

도, 농업농촌 6차 산업 확산 집중

11개 주요 정책사업 선정 156억원 투자... 핵심주체 230개소 지원

전북도는 '농업인이 체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업농촌 자원의 6차 산업화'를 목표로 생산기반조성, 인종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6차 산업의 확산과 매출액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내 6차 산업 인증사업자는 170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임실군(치즈)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수도권·도내 우수제품 판매촉진 행사를 추진하는 등 6차 산업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했다.

전북도는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인력, 시설 및 자금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아울러 올해 농업인 및 소비자 위한 주요 정책사업에 11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6차산업 핵심주체를 위한 지역 중심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희망 농업인의 컨설팅, 지원정책홍보, 시제품 생산, 창업코칭 등을 통한 6차산업 핵심주체 230개소를 지원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과 농장에서 소비자 시장까지 일관된 판로 지원체계(경영체별 DB구축, 맞춤형 상담 및 코칭, 우수제품발굴, 시장조사, 전문매장 입점)를 구축한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평가는 무효다”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최근 수행한 '시내버스 평가'가 편향적으로 이뤄졌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전주시가 심사 도중 갑자기 평가방식을 변경해 특정업체의 순위를 올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전북도는 6차산업 주체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대상 범위, 집중 육성대상 및 지원성과 평가 등을 위한 지역별 제조·가공시설 기초통계조사 후 6차산업 경영체 시설자금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체에게 6차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 가공, 체험 시설 등 보안을 위한 시설자금을 1개소당 1억원씩 10개소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역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활

용·연계해 산업주체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인프라조성, 전담 컨설팅 등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산관리·농업진흥 등 규제 지역에도 6차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해 융복합 사업 추진 시 숙박시설, 휴게 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토록 '농촌 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융복

합시설제도'를 상반기 도입계획으로 6차산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삼락농정(三樂農政)인 '보람'은 농민, 재래농민, 농업, 사람, 찾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6차 산업 경영체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6차산업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유통 마케팅을 중점 추진해 농민,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23일 설 맞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지방행정연수원 로비서... 150여 품목 10~30% 저렴

전북도가 농업중앙회전북본부와 공동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방행정연수원 1층 로비에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오는 23일 운영한다. 이번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설날'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농 및 마을에서 생산한 마을상품, 6차산업 인증품, 우수 농특산물 등 로컬푸드 중심의 다양한 품목으로 14개 시군에서 27개 업체가 참여한다. 과일 선물세트, 농산물, 한과류 등 150여 품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장터는 일반 시장 가격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인재용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북도는 지난해 1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비롯해 외국인 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그간 개별법에 산재해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반인들도 편하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관련제도의 일원화 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했는데,

일례로 매매거래 성격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기존에는 시·군·구에 검인신고가 필요했으나 검인신고 절차 없이 거래 신고만으로 대체된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하는 등 이원화된 법령을 단일 법률로 통합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부동산 거래 허위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라니언시)가 새롭게 도입 된다. /인재용 기자

도, 여수수산물시장 화재 위문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19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여수수산물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도지사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전통시장이 화재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매우 안타깝지만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언제든지 지원 요청하면 전북도는 여수시로 달려갈 준비가 돼있다"면서 이번 화재에 대한 전북도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화재발생 당일, 피해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도내 전통시장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도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전기사용 방지 및 화재재난 대응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청렴해피콜'·건설 '허심탄회의 장' 간담회·청렴마일리지 제도 등 높이 평가

전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해 2년 연속 1등급 유지로 다시 한번 청렴한 공공기관의 표상으로 떠올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에 있는 2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외부전문평가기관과 반부패추진계획, 실행(청렴생태계조성, 부패위험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성과.확산(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법사례 확산) 등의 지표를 측정하는 것이다. 부패방지 평가는 총 6개분야 40개 세부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설문평가, 현지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외부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까다롭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법사례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최우수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에 대해 전체 이행완료하고 공사, 보조금 등 부패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으로 만족도, 친절도, 부패경험도 등을 조사하는 '청렴해피콜'을 도입해 미흡한 부서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건설분야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협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15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허심탄

회의 장' 소풍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도와 시·군 건설부서에 개선 조치하도록 하는 등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해 클린건설문화 조성에 힘써 온 것도 대표사례로 뽑혔다. 이 외에도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전북지역 전 공무원의 청렴 생활화를 도모하고, 청렴연수원 '청렴콘서트' 개최 등 도내 청렴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도 높이 평가받았다. 박용준 감사관은 "전 청원이 청렴을 공직자 몫으로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며 "올해에도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 운영해 청렴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농축수산물품목,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장 방문

전북도 농축수산물품목 팀.과장급 간부 35명은 19일(목)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농지조성 공사 진행상황 및 조사료 생육 등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첨단농업 특화단지, 말산업 복합단지' 등의 본격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9,430ha로 간척지 전체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7개 공구로 나눠 농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제5공구는 올말에 완공되고, 나머지는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5공구는 1,513ha로 첨단농업시험단지170ha, 농업특화단지 700ha, 시설원예단지 327ha, 농산업클러스터 300ha, 농촌마을 16ha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단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농지 조성공사 완료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 간척용지 미 공사 구간 중 농기계 작업이 가능한 1,000ha 면

적은 조사료 재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내 6개 농·축협과 7개 농업법인 15천톤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 공업용수 공급사업 순항중

군산시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하기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이 한창이다. 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오식도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시 기존 배수지의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 2012년 새만금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250억원(국비)을 확보해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입주기업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남원시 공고 제 2017 - 100 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개최계획과 「농지법」 제3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 나.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890,804㎡
 - 라. 사업시행자: 신한레저 주식회사
2.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 가.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453답 외 7필지
 - 나. 목 적: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다. 해제계획(안):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 밖 9,826㎡
 - 라. 법률근거: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마.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사: 공람장소에 비치
3.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간: 2017. 01. 20 ~ 2017. 02. 16(공고일로부터 20일이상, 공휴일 제외)
 - 나. 장소: 남원시 관광과, 남원시 농정과, 대산면사무소
4.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시: 2017년 2월 7일(화), 10:30
 - 나. 장소: 대산면사무소
5. 주민의견 제출
 - 가. 제출시기: 2017. 01. 20(공고일)-02. 24(공고일로부터 공람만료 후 7일 이내)
 - 나. 제출장소: 공람장소(남원시 관광과, 남원시 농정과, 대산면사무소)
 - 다.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하여 서면제출
6.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농업진흥지역해제 관련 도서: 개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관광과(☎063-620-6177) 및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20. 남 원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

(순창군 생치면)

- ▲피노마을 주민 일동 300,000
- ▲둔전마을 주민 일동 200,000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